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 270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4.

복지문화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4. 22.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홍복조 의원 외 12인
- 발의일자 : 2020. 3. 23.
- 회부일자 : 2020. 4. 9.
- 검토기간 : 2020. 4. 10. ~ 2020. 4. 17.

2. 제정이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나. 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명칭 및 위치(안 제3조)
- 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안 제4조)
- 라. 운영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의 해지(안 제6조~안 제8조)
- 마. 운영위원회의 구성(안 제10조)
- 바. 사업지원 및 지도·감독(안 제11조, 안 제12조)
- 사. 센터 이용제한(안 제14조)

4. 관계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5. 검토의견

-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상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¹⁾의 정신질환 예방·치료 및 재활 지원 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²⁾’) 등을 통해 이들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련의 제도적 틀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음.
- 상위법에서는 동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의 하나로 지자체로 하여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외부 전문 기관에의 위탁 운영 포함)토록 하면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조례(나 규칙)을 제정³⁾ 하여 관리하도록 규정(제15조)하고 있음.
- 달서구 역시 상위법 규정에 따라 「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를 그동안 운영(학교법인 선목학원, 대구정신병원에 위탁 운영)하여 왔으나, 별도의 달서구 조례를 제정하지는 않았음.
- 금번 조례안은 구 조례 없이 운영되어 온, 동 센터 운영 방식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내실 있는 센터 운영을 위한 구체적 틀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의원 발의된 제정 조례안.
- 조례안 각 조문들을 살펴볼 때, 일련의 상위법 규정을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위탁 운영의 근거(안 제6조에서 안 제9조)를 마련하는 한편, 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안 제10조)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안에 대해 특별히 논란의 여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법 제3조제1호)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법 제3조제2호)

3)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현재 16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운영 중.

【관계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